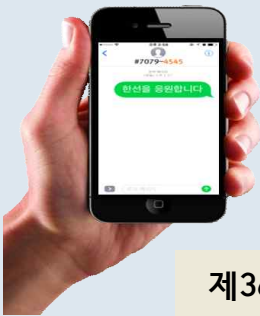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국가 채무와 미래세대
[발제자]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일 시] 2021년 3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60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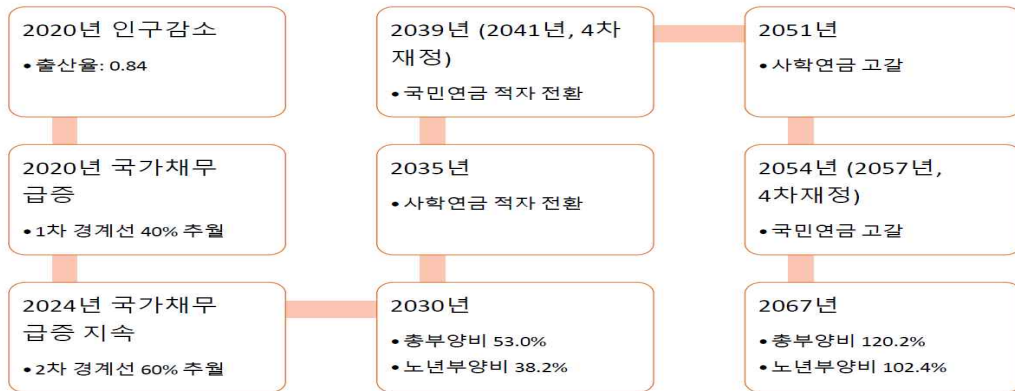
요 약

- 대한민국의 리스크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가 채무 급증과 비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정책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대두되면서 재정지출은 더 악화되었다. 결과적으로 투자는 줄어들고 정부의 씬씀이는 늘어나 국민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 기업경쟁환경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시킴으로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상황 개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호전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고용 사황이 더디게 개선되면 경제 활성화는 멀어지고 이는 미래세대로 전가될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비용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대응은 경제의 다운리스크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 바로 내년부터 경제의 하방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 이미 국가 채무 누적으로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며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여기에 출생률 감소에 기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보험 기제가 파괴되고 국민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되면서 경제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현재와 미래를 위해 재정지출의 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

◆ 대한민국의 시간표



- ◆ 2020년 출산율이 0.84이다. 이대로라면 60년 내에 인구가 1/4로 줄어든다. 게다가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 채무가 ‘GDP대비 1차 경계선’인 40%를 넘었다. 이 의미는 현재 우리의 조세부담률, 경제성장률, 이자율을 고려할 때 지출을 동결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세수증가분으로 이자를 갚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지출을 동결하더라도 국가 채무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있다. 2024년에는 국가 채무가 2차 경계선인 GDP대비 60%가 넘을 전망이다. 10년 뒤의 총 부양비는 53%, 노년부양비는 38.2%로 15세에서 64세 인구의 40%정도가 노년층으로 형성될 것이다. 4차 재정추계에 의하면 2035년이 되면 사학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41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된다. 2051년에는 사학연금이 고갈되고 2054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부가방식으로 국민연금을 바꾼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40년 동안 23% 내지 25%의 기여율을 내야 소득 대체율 40%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 2067년에는 총 부양비가 120%, 노년부양비는 102.4%로 증가한다. 이는 미래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다.

◆ 대한민국의 리스크

- ◆ 대한민국의 리스크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가 채무 급증과 비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재정정책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시기엔 정부 재정지출이 1만큼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5배 정도 증가했다. 현 정부는 정부 재정지출이 1만큼 증가해도 국민소득은 0.5배에 불과하다. 방만한 재정지출이 그 원인이다.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대두되면서 재정지출은 더 악화되었다. 결과적으로 투자는 줄어들고 정부의 씹씹이는 늘어나 국민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 ◆ 잠재성장률은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현재는 잠재성장률이 1.1%까지 떨어졌고 2020년 경제성장률은 -1%이다.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에 의하면 2040년의 국채 비율은 100%에 이른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2030년이나 다음 정부쯤엔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를 감당하려면 여러 가지 부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제는 국민 부담의 급격한 증가 가능성이다. 현재에도 경제성장률보다 월등하게 빠른 속도로 국민 개개인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생산 가능 연령층은 줄어들고 세 부담은 늘어나면서 경제는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는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 정부가 유발한 정책리스크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제, 공기업의 정규직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시킴으로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상황이 개선되더라도 고용 상황이 급격하게 호전될 가능성은 낮다. 고용상황이 더디게 개선되면 경제 활성화는 멀어지고 결국 미래세대에 그 어려움이 전가된다. 기업의 경영환경 또한 계속 악화되고 있다.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포함한 기업규제 3법 등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강화는 경제위축을 불러올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비용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있다. 다음 정부는 에너지 수급의 합리화를 통해 환경도 보호하고 에너지 비용을 합리화함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금융은 유동성 공급으로 위험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만기를 연장시키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전략은 이미 실패했고 인구구조는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 코로나 대응으로 경제의 다운리스크가 더욱 증가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다운리스크 관리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지만 현재의 상황도 불투명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재와 미래를 위해 재정지출과 정책의 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

◆ 일본의 사례와 우리의 미래

- ◆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뤘지만 결국 버블로 이어졌다. 총 대출 규모를 제한해 버블을 막았지만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91년부터 금리 인하 등 경제 활성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국채 의존도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91년에 전체 예산 중 빚을 내서 예산을 조달하는 비율이 7.6%였던 것이 3년 만에 18.7% 4년에는 28.2%로 증가하며 경제는 더욱 악화됐다.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보며 재정지출과 같은 총 수요정책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예산 중에서 빚이 1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90년대 초반 상황이다.
- ◆ 일본의 과거와 현재의 재정구조를 비교해보면 사회보장관계비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의 지출 명목금액은 과거와 차이가 없다. 일본은 현재 사회보장관계비를 감당하기 위해 빚을 내고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써야 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일본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이를 경계해야 한다.

◆ 정책 제언

- ◆ 재정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내년부터 경제의 다운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우리 경제는 국가채무 누적으로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채무문제는 우리의 어깨를 더 짓누를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는 현재의 사회보험 체제, 사회보험 메커니즘을 파괴하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새로운 사회보험제도를 갖추어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재정의 국민부담률이 상승해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현세대에 가능한 한 빨리 재정지출의 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